

[좌담회]

2020 '자유의 밤'

다시 고전에서 길을 묻다

- 일시: 2020년 12월 7일 (월) 15시
-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사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1섹션]

프레데릭 바스티아 '법' / 서영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박제가 '북학의' / 김시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 박재민 서강대학교 학생

리처드 파이프스 '소유와 자유' / 이명재 상명대학교 학생

[2섹션]

애덤 스미스 '국부론' /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루드비히 폰 미제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칼 포퍼 '열린 사회의 길' /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

제임스 뷰캐넌 '헌법경제학' /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 섹션-

「법」을 읽고 지금을 말한다

서영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하루에도 수도 없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새로 생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여의도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공장처럼 법안을 찍어내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이도 있다. 물론, 우리 삶에 필수적인 그런 법안들은 새로 만들어져야 하며 지속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가령 학교에서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규칙이 수백, 수천 개라면 그 교실은 자유로운 교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학급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면 적합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규칙은 학급의 안정과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딱 거기까지다. 학교에 대한 비유를 사회로 옮겨온다면 법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타인의 약탈로부터 보호하기를 위한 장치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조금의 불멘소리만 나오면 바로 입법이 된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어느새 우리의 수많은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

법은 나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앗아가려는 타인을 지킬 수 있으면 된다. 책 『법』의 저자 바스티아는 수만 가지 규제가 생기고 있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정의를 수호하는 나라라고 평가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에게 정의로운 사회는 서로 약탈만 하지 않는, 인간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재능이 개인의 것이듯이 재산도 개인의 것이다. 개인의 재산은 사회의 것도, 국가의 것도 아니다.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한 것이고 국가는 개인들이 필요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개인이 있음 다음에 사회와 국가가 있고 개인의 재산권이 지켜져야 사회와 국가의 재산도 보장이 된다. 지금 우리의 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개인의 재산을 뺏아가려 하는가?

타인이 나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의이다. 반대로 약탈이 합법화되면 우리는 법이 타락했다고 말한다.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법이 생겨 누군가의 인격과 자유, 재산을 착취하게 되었다면 약탈행위에 권리라는 이름을 붙여 약탈을 합법화시킨 것이다. 대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절반을 국가가 가져갈 권리는 약탈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회에서 성실히 일하라고 해서 평생을 바쳐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에 따른 세금이 계속 오른다는 게 정상적인 정의인가? 바스티아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법의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타락화된 법치라고 평가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법이 타락하면 크게 두 가지다. 법이 타인을 약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그것에 익숙해진다. 국가의 지원에 익숙해지고 개인의 기본적인 재산을 지킬 방어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둘째로는 법이 원칙에서 벗어나 규제, 보호, 장려 등의 미명하에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쥐 버리면 어떤 집단이 빼앗기지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겠는가. 이제 사람들은 먹고사는 일에만 노력을 쏟을 수 없다. 입법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입법권의 획득이 곧 더 잘 먹고 잘살게 해주는 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모두가 자신에게 특화된 일을 통해 생산력과 부를 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보다 나에게 맞는 법안을 통과시켜 뺏어오는 게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이 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게 정의인가?

선거 때마다 아니 요즘은 선거가 아니더라도 복지에 대한 논쟁이 끝없다. 무상교육이든, 반값 등록금이든 당장은 공짜처럼 보이거나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자는 몇 명 되지 않고 부자 증세로 거둘 수 있는 돈도 얼마 안 된다. 결국, 비용은 일반적인 시민이 낸 돈으로 부담하고 당신의 자식이 부담하게 된다. 세금은 반드시 만들어지거나 행해져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의해서 또는 민간이 부담하기 힘든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돈을 정부가 무언가 해주는 것처럼 특정 집단을 지원하게 된다면 나서서 납세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먼저 세금을 늘려야 한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출이 줄어든 산업은 생산이 줄고 일자리는 그만큼 필요 없게 된다. 복지, 복지 하기 이전에 공공 지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그 어떤 법안도 정책도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데 제1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 외의 규칙은 정말 필요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규칙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우리의 법이 과정을 공평하게, 또 본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지켜주는 데 역할을 다하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수천, 수만 가지의 규제로 얼룩져 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켜주면 정치에서 승리하고 그들은 다시 득표하기 위해 또 그런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 법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바스티아가 바라보았던 ‘법’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특정 산업과 집단을 보호 육성시키는 정책 따위는 당연히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수천수만 가지의 규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유로운지, 또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박제가의 조선 비판, 지금도 유효한 현실

김시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제가의 시대를 앞서간 실용주의자였다. 그는 그의 저서 「북학의」에서 유가사상에 젖어 실리는 뒷전으로 한 채 명분과 체면만을 앞세우던 당시의 조선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북학의」는 그의 탈근대적 감각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당시 조선의 지도층이었던 사대부들은 효율적·실리적 사고를 오히려 부덕한 것으로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도덕률에 갇혀 가난과 궁핍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박제는 「북학의」에서 이런 기행적 풍조를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제는 조선이 맹목적인 명분론과 도덕적 허울을 벗어던지고 현실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세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도덕적 이상만으로는 산업과 기술을 진보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박제는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무엇이 삶을 풍요롭고 더 낮게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박제의 사상과 주장은 파격 그 자체였다. 그렇기에 안타깝게도 선각자 박제의 사상은 주류에서 벗어난 채 그렇게 세월에 씻겨 사라졌다. 조선은 박제의 고언을 무시한 대가로 머지않아 갖은 열강의 침략과 내분, 마침내는 식민지배라는 값비싸고 치욕적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제가와 그의 비판의식은 200여년도 더 된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유효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건만 ‘착함’, ‘정의’, ‘공정’ 등을 위시하며 명분으로 하여금 실리와 이익을 집어삼키고 있는 정책과 기조들이 난무하다. 작금에 가장 높은 원성을 사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보자. 수요가 많아 자연스레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대신 몇몇의 확인되지 않는 투기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위정자들이 바로 현대의 사대부들이다. 그들은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바탕으로 공급을 틀어막는 것으로는 모자라 수요까지 눌러버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난무하는 부동산 규제정책들과 각종 규제의 바탕에는 가난한 것이 착한 것이고 가지려 하는 욕심을 죄악시하는 인식이 있다. 이와 같이 소유를 죄악시하는 관점은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재산권의 무자비한 침탈로 화룡점정을 찍고 말았다. 소위 ‘착함’을 위시하고 현실을 외면한 정책들은 집을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기업의 자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공정경제 3법 역시 실패의 연속인 부동산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중 감사인사 선인에 있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단연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오만가지 명분을 내세워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다른 조항은 차

치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대주주 본연이 가진 자연스러운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다. 이는 소유와 자유의 관계를 아예 정면으로 부정해 버리는, 가진 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감시받고 견제 받아야 한다는 소위 말해 '선 넘는' 독소조항임이 틀림없다. 기업은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개체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경제적 가치를 위법하게 창출하지 않는 이상 격려와 지원을 받아 마땅한 사회적 생물이다. 하지만 부부와 소유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은 공정경제 3법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기업과 자유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박제가가 지금 마주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박제는 인간의 욕망을 좌악시키는 무의미한 도덕의 탈을 쓴 폭력을 멈추고 자연적 수요와 실리에 따른 공급책의 확대와 시장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다. 오히려 수백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도덕맹목지향성을 보며 체념할지도 모를 일이다. 「복학의」의 한 부분을 빌려 지금보다 더 개탄스러웠을 당시 조선에 대한 박제의 외침을 지금의 현실에 옮겨보며 짧은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용후생(利用厚生)에서 한 가지라도 갖추어지지 않을 때에는 정덕을 따지는 것이 허울 좋은 이상에 불과하다.” 현실에 눈을 뜨라는 박제의 절규를 무시한 조선이 허울과 명분에 젖어 결국 망국의 길을 제 발로 걸어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박재민 서강대학교 학생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모두가 인정하는 자유주의의 고전으로, 시대를 앞서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노예의 길>은 전체주의의 풍파가 전 세계를 휩쓸던 1944년에 출판되었는데, 하이에크는 이 책을 통해 집단주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사회를 빈곤하게 만드는지를 말하고자 하였다. 지금에 와서 이토록 오래 된 책을 다시금 거론하는 것은 <노예의 길>의 메시지가 약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의 지배'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 6장은 과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욱 적실성을 갖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하이에크의 설명을 인용하면, 법의 지배란 “정부가 모든 행동에서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경우에만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간의 박탈할 수 없는 권리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고 사회를 계획하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법의 지배라고 하는 원칙을 통해 정부의 자의성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자의적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정부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입법에 한계가 없다면 정부를 제약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이에크는 법이 “특정 대상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정부는 자신들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도 준수하지 않을 만큼 자의적인 행정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정은 개인이 자신의 경제생활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경제생활을 크게 위축시키게 되었다. 또, 국회의 입법도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역사왜곡금지법의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인식’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하이에크가 금지한 특정 대상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을 보호하는 수단이어야 할 법이 이미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법의 지배는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이며, 그 폐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노예의 길>의 메시지, 즉 법의 지배와 같은 중요한 원칙이 훼손된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번영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욱 적실성을 갖는 이유이다.

본 글에서는 여건상 법의 지배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훼손되고 있는 가치는 법의 지배뿐이 아니다. 최근 '경제적 통제'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단이어야 할 민주주의는 하나의 목적이 되었으며, 공공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고 있다.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지적한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염없이 '노예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노예의 길>의 역자인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께서는 역자 서문에서, "이 책처럼 사상의 물줄기를 돌려세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책은 드물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예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건과 대처의 자유주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 역시 얼마든지 노예의 길로 향하는 뱃머리를 돌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노예의 길>이 약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

이명재 상명대학교 학생

개요

'리처드 파이프스'라는 고전인물을 알고 그가 주장하는 소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를 인식하고 고전 인물이 주는 교훈을 새긴다.

핵심용어: 사유재산, 시민권, 자유, 평등, 복지국가

인물소개

파이프스는 1923년 출생 폴란드 출신 유대인. 16세가 되던 해 나치 독일의 공격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 1943년에 군사정보관으로 공군에 입대. 군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한 경험으로 러시아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음. 당시 미국에게 소련은 핵심 견제 대상. 파이프스는 1957년 34살의 나이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 얻음. 이후 그는 Team B에서 CIA를 견제하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활동과 함께 레이건 정부의 대소련 정책에 기여함. 대표작으로는 『소유와 자유』, 『공산주의의 역사』가 있음.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

책은 소유의 개념과 그에 대해 부속된 제도의 발전과정을 서술함. 영국과 러시아라는 상반된 사례를 통해 소유와 자유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 증명함.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공산주의의 몰락을 경험하며 자유와 소유에 대한 전통적 위협은 줄어들. 허나 현대에는 사회정의와 공공선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소유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가 파괴됨. 소유의 권리, 그 자체만으로 시민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소유권이었음.

사회주의의 경제적 실패로서 생산수단에서 사적소유를 없앨 경우 모든 사회악이 해결될 거라는 이상은 환상임이 밝혀짐. 비록 사적소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독재자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립되거나 점차 시대의 정신에 굴복함. 오늘날의 화두는 민주주의와 사유화임. 하지만 자유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음. 자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으로부터 위협받음. 오늘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폭정이 아니라 평등임(복지국가). 동일한 보상으로 정의되는 평등, 즉 결과의 평등을 말함. 하지만 불명확한 평등의 추구는 자유를 파괴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유발함.

인류역사상 지금까지 많은 국가의 헌법이 사적 소유의 불가침성을 약속한 적은 없었음.

그러나 사회복지란 명분 하에 부를 분배하고 시민권을 위한다며 계약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그렇게 소유권이 흔들리고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공격받음. 비록 평화 속에서 부가 축적되고 민주적 절차가 준수되는 모습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듯 보이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대립에서 시작된 “소유 논쟁”은 21세기에 들어 “복지국가”의 형태로 탈바꿈함. “재분배, 복지, 공공선, 불평등 척결,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구호” 정도가 있음. 정부라는 허구의 권력집단은 주면서 동시에 가져가고 소유권에 대한 침범은 항상 분명하지 않음. 왜냐하면, 수혜대상(?)을 위한 일이 애매한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임.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침해하면, 이는 곧 자유의 파괴로 이어짐. 더 무서운 것은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겉으로는 멀쩡한 민주적 방법과 공익을 위한다는 대의를 통해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임. 차별을 금지하거나,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법부터 상속·증여세법이나 투기꾼을 잡아야 한다며 시장과 싸우는 부동산 정책 등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악한 것으로 보는 철학이 담겨있음. 이는 인간의 본능과 기본적 욕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철인정신의 해악임.

인류는 숭한 투쟁을 통해 자유를 쟁취함. “자유란 생명이고 재산임.” 이 세 가지는 삼각대와 같음. 따라서 어느 것 하나라도 권력에 의해 공격받으면 균형이 무너짐. 21세기 복지 문명국이라 자처하는 사회집단체제의 폭주에 멈춤이 필요함. 최근 위선적(나였으면 지키지 않을 것을 남에게 강요함) 법이 특히 문제임. 주택임대차보호법(착한 임대인을 강요), 각종 세법(상속증여, 종부세 등)과 공정을 들먹이는 법안은 위선적이면서 소유권을 침해함. 우리는 이러한 사회정신과 법을 개선하고 견제해야 함.

결론

우리가 영위하는 열린 사회, 자유 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업경제는 인류역사상 최고로 발전한 문명과 사회임에 분명함.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문명과 자유를 지키는 자명한 길임. 하지만 현대에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무비판적 사회 분위기가 우리를 위협함. 소유를 침범하면서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모두 잃을 것임.

토론거리

도덕지향적 정책과 법안은 공정과 평등을 들먹인다. 그 후과로 사회 구성원들은 위선적 언행과 상대적 도덕을 강요하면서 받는다. 역설과 모순에 휩싸여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 근래에는 풀소유 헤민스님, 징벌적 세금(상속·증여·종부세), 공정거래법 등이 시끄럽다. 이런 요란한 논란으로부터 개인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2섹션-

고전으로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갖는 의미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 왜 고전을 말하는가?

0 고전을 뜻하는 classic은 '소환', '호명'을 뜻하는 그리스어 kaléō에서 유래. 동원어 class는 원래 그리스 시대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 별 그룹 (해병, 보병, 정찰병)을 일컬었고 로마시대에는 시민들의 신분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을 의미. => classic이란 어떤 영역에서 특정한 형식과 내용을 탁월하게 창조해 후대에 Origin으로 인정되며 끊임없이 호명되고 소환되는 작품.

따라서 고전은 현대와 소통 관계에 있으며 끊임없이 재해석되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

0 고전의 가치는 어떤 한 세계에서 변화하는 것들에 내재한 불변의 아르케(Arche)를 포착해 냈다는 점에 있음. 이는 현대 위상수학에서 삼각형을 차츰 부풀려 변형해 가면 마침내 원이 됨으로써 원과 삼각형뿐만 아니라 모든 단순 폐곡선의 도형이 같은 도형임을 알게 하는 토폴로지에 비유할 수 있음.

0 따라서 고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한 고전에 의해 창출된 하나의 세계의 원천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세계는 아무리 복잡다단하게 변화한다고 해도 결국 Origin이 가진 경로와 Topology에 의해 종속된다는 점에서 그 세계에서 길을 잃거나 길이 막혔을 때 되돌아가서 반추해 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무엇이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 국부론의 고전적 가치와 미래성

1. Self-interest라는 인간본성에 대한 탐구

0 국부론은 단순한 경제학 지식서가 아니라, 인간본성(Human Nature)에 관한 탐구서로서, 사회의 공동선이 어떻게 개인들의 자발적 Self-interest에 의해 가능한 지 그 원리를 밝힘.

그 결과 근대의 경제인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등장을 규명함.

=> '인간은 죽어서 하나님의 곁에 서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승에서 생필품의 풍요를 누림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국부론 中>

0 국부론의 Self-interest는 이후 근대 경제학에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

개인'으로 수용되면서 도구적 이성만을 가진 개인으로 오해되는 현상이 만연해 짐.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self-interest는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는 제3의 공정한 관찰자'를 자기 내부에 가진 개인의 내면임. => 빵집 주인이 더 많은 빵을 팔기 위해 중량을 속이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손님이 불행해질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밝혀질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제3의 공정한 관찰자'들에 의한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신중을 기하기 때문.

2.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의 도덕성과 정치성

0 국부론의 중요한 개념인 '보이지 않는 손'은 좁게는 시장에서 자기 조절 기능을 가진 가격의 역할을, 넓게는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의 의도되지 않은 협동을 말한 것임. 따라서 이 원리는 단지 시장경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으로 성립하는 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치 원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0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원리는 수 많은 개인들이 재화의 가격을 놓고 동의하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으로, 이 원리는 언어가 사회적 약속으로 등장하는 자생적 원리와 동일함. 이는 한 사회에 저마다 다른 개인들의 도덕적 준칙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의되고 거부되면서 도덕적 규칙으로 성립하는 이치와 같고 이는 확장한다면 한 자유민주 국가에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루소의 주권 개념으로 표상되는 국민의 총화된 일반의지, 또는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헌정적 규범이 등장하는 원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0 이러한 국부론의 원리는 이제까지 정치와 경제는 독립적이라는 근대 경제학을 통합된 정치경제학의 영역으로 귀환시키면서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장 간에 새로운 관계들을 발견하는 미래의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치와 경제, 국가와 시장 간에 통합된 이론을 국부론에서 발견하기를 기대함.

▣ <국부론>에 비추어 본 한국 경제의 위기성

1. 부(Wealth)에 대한 오해

0 아담 스미스에게 富란 교환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임. 화폐는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화폐를 늘리는 것이 부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교환의 증대를 통해 '저렴과 풍부'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기업이든 가게든, 화폐로 표시된 자본이나

자산을 부로 간주해서 생산력에 관계없이 보유금액에 세금을 부가하는 것을 정의로 착각하는 경향이 만연함.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자가로 사용하는 주택에는 세금이 붙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니라,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대료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부여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동시에 정당함.

0 집이든 상가든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를 놓고 있는 사람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교환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는 부의 창출자들임. 이들을 불로 소득자로 인식하는 것은 부의 원리를 망각하는 것. 마찬가지로 재산을 현찰 보관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투자한 부자도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 그 화폐자산을 다른 이들이 이용하기 때문.

2. 자본과 노동에 대한 오해

0 아담 스미스는 자본 간에 경쟁이 치열할수록, 특히 큰 자본들이 투자처를 놓고 경쟁할수록 고용은 늘고 임금도 상승한다고 국부론에서 설명함. 이 원리는 부가 자본만으로는 창출이 안 되며 노동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본의 고도화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함.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큰 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착각을 신념으로 갖고 있음. 그 결과 고용이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초래됨.

0 특히 주 52시간과 같은 근로규제는 자본의 유희실업을 가져오게 되고 기업들로서는 투자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 동시에 근로자의 경우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없을 경우, 임금의 실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됨.

3. 공공을 내세운 만연한 지대추구(Rent seeking)

0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신흥자본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익 추구를 공공의 이익으로 내세워 세금을 이익으로 수취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지대추구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

0 그러나 우리 현실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나 4차융복합 사업에 공익을 내세운 협동조합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대추구적인 정경유착이 심각할 정도에 이르며 이는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음.=> 원전 축소와 보조금 통한 전기차 2천만대 보급 계획 등.

0 아담 스미스는 공공재에 대한 정부 공급은 국부론에서 찬성했지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공공재는 시장거래를 확대하는데 유효한 상황만으로 한정했고, 관리와 유지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했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SOC를 비롯해 사회복지 차원의 공공서비스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는 물론, ‘무임승차’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피할 수 없음.

[참고문헌]

 , 유인호 역, 동서문화사, 2015

국부론(國富論)이 던지는 메시지, 장오현, (제도와 경제, Vol.7 No.2, [2013])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도덕감정론』을 전제한 『국부론』의 이해를 중심으로,
 김봉수, 총신대논총 제32집 (2013년)

아담 스미스(Adam Smith) 경제학의 철학적 기원: 경제적 사회적 질서 개념을 중심으로,
 이상헌 (Sang Heon Lee), (經濟學研究, Vol.57 No.1, [2009])

딱 맞게 풀어 쓴 국부론, 한정석, 자유기업원, 2020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Planning for freedom} :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미제스의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는 마치 지금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쓴 것 같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70여 년 전 미국 사회가 좌경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고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사회주의, 케인스주의에 영향을 받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경제를 개입했다. 미제스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이 빨리 좌경화 추세에서 벗어나야 유럽 국가들이 겪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제스의 우려대로 미국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기치 하에 전방위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늘렸다.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 압박, 가맹점 제빵기사 직접 고용 등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입각하여 산업을 파괴하고 기업들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했다. 탈원전 정책, 법인세 인상,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개별 기업에 대한 간섭,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법제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강화, 공정경제3법(기업규제3법;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그 외에 기업이나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친노조-반기업정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일회용 컵 사용 단속, 먹방규제 등 일반 국민들의 생활까지 규제하는 법까지 서슴없이 만들었다.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켰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 격이 폭등하고 시장이 교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세 인상 등 가렴주구로 국민들의 재산권이 심하게 훼손됐다. 내년에는 최고소득세를 42%에서 45%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일련의 조치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 사회전반을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로 정부와 노조의 권력을 커졌고, 정부 정책이 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 일자리 파괴, 실업 증가, 성장 동력 쇠퇴, 중산층과 자영업자 몰락, 기업도산 속출, 기업들의 생산 중단

과 해외 탈출, 기업투자 감소, 빈곤층 소득 감소, 소득불평등, 구성원들 간의 갈등 심화 등 나라 곳곳에서 위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확대통화정책을 통해 돈을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미제스는 임금 소득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 자본가와 기업가를 비방하고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빈곤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파한다. 국가의 번영과 노동자들의 임금은 투자되는 자본의 지속적인 증가에 있으므로, 새로운 자본의 투자와 축적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그러한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친노정책은 노동자 집단이 대다수 국민을 희생하여 자신들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에 전념하는 상황을 초래해, 결국 전반적인 생산성이 하락함에 따라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가 쇠퇴하고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며 경제위기로 치달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기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선호하고, 극단적으로는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치인들, 지식인들, 언론의 영향이 크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은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총 국민소득으로 세계 10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하는 '경제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덕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가난의 책임을 가진 자와 대기업의 착취 때문이고,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동해 왔다.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겪지 않으며,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시장, 반기업, 반자본주의 정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 시켜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

미제스가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가 파멸로 다가가고 있다면 그 누구도 자신만의 안전한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적 싸움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누구도 무관심하게 방관할 수 없다. 모두의 이익이 그 결과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 모두 반시장, 반기업, 반자본주의와의 이념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지금 제도화된 반시장적, 반기업적, 반자본주의 법과 제도들을 걷어 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실전한 국가는 잘살고 번영을 누렸지만 그와 반대의 길을 갔던 국가는 모두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인류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칼 포퍼의 <열린 사회의 길>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

비판적 합리주의

“과학 또는 철학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문제와 만나고, 그 문제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 문제와 사랑에 빠져라. 만일 더 매혹적인 문제와 만나지 않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죽음이 당신을 그 문제와 갈라놓을 때까지 그 문제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¹⁾

“나는 합리주의자다. 내가 의미하는 합리주의자는 세계를 이해하려 하고, 다른 사람과의 논쟁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 ‘다른 사람과 논쟁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판에 끌어들이고 그 비판으로부터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논쟁의 기술은 싸움의 특수한 형태이다. 논쟁은 칼 대신 말을 통한 싸움이다. 세계에 대한 진리에 가까이 가려는 관심이 논쟁을 이끌어간다.”²⁾

“내가 잘못이고 네가 옳을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³⁾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설을 비판할 수 있으며 그런 악성의 가설을 만들어 내거나 대변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끊지 않고도 그 가설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 그 가설을 제거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비판적 방법의 성과이다. 비판적 방법은 가설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단죄하면서도 그 가설의 창안자를 잘못되었다고 몰지 않는다.”⁴⁾

“국가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구분된다. ……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한다면 폭력 없이도 붕괴될 수 있는 정부가 민주주의이고 그렇지 못한 정부가 전체주의이다.”⁵⁾

1) Karl Popper, *Realism and the Aim of Science* (1982), p.8.

2) Karl Popper, 앞의 책, p.6.

3) Karl Popper, *The Open Society & Its Enemies*, New One-Volume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p.431.

4) Herbert Marcuse and Karl Popper, *Revolution or Reform?* (New University Press), 1976, p.97.

5) Karl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p.344~45.

지식의 성장과 열린사회

열린사회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⁶⁾라는 주장을 지지한다면, 닫힌사회는 “현명한 자는 이끌고 통치해야 하며, 무지한 자는 그를 따라야 한다.”⁷⁾는 주장을 옹호한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

“점진적 사회공학과 대비되는 전체론적 또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사적 성격을 갖지 않고 항상 공적 성격만을 갖는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의 목표는 명확한 계획이나 청사진에 따라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것이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요새를 점거하는 것’, ‘국가 권력을 국가가 사회와 일치할 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더 나아가 이 ‘요새’에서 발전하는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역사적인 힘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어떤 발전을 저지하거나 사회의 진행 경로를 예견하거나 사회를 그 경로에 맞춤으로써 요새에서 역사적 힘을 통제하려고 한다.”⁸⁾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의 문제들

“정치적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과학적으로 또는 순수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 견해의 차이는 논증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적어도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종교적인 차이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토피아적 종교 사이에는 관용이 존재할 수 없다. 유토피아적 목적은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의 기초 구실을 하고 그러한 행동은 목적이 명확하게 결정된 뒤에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유토피아주의자들은 그들의 유토피아적 목표에 동조하지 않거나 유토피아적 종교로 전향하지 않는 경쟁자들을 압박하거나 말살할 수밖에 없다.”⁹⁾

“폭력은 언제나 보다 심한 폭력을 유발하며, 혁명은 혁명가를 죽이며, 그들의 이성마저 파괴해 버린다.”¹⁰⁾

“유토피아적 청사진이 결정되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바람직스럽게 보였던 것이 그 후에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유토피아주의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노력

6) Karl Popper, 앞의 책(2013), p.177.

7) 같은 책, p.114.

8) Karl 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6) p. 67.

9) 같은 책, pp.359 ~ 360.

10) Herbert Marcuse and Karl Popper, 앞의 책(1976), p.86.

하다가, 그 목적을 변경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결정된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 변한다면, 우리가 처음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을 결정하고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준비해 온 과정 전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¹¹⁾

점진적 사회공학

“점진적 사회공학자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 복지와 같은,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이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사회 전체를 재설계하는 방법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의 목적이 어떠하든, 그는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의 조정과 재조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¹²⁾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자는 사회 실험을 할 때, 사회 구조 전체를 고쳐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그는 보다 소규모의 실험을 하나의 작은 사회의 전체 구조를 고치는 실험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사회 제도만을 바꾸는 실험을 통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제도가 다른 제도의 구조와 어떻게 들어맞는지, 그 제도들이 우리의 의도에 따라 작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미래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반발을 초래하지 않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 더구나, 유토피아적 방법은 수없는 희생을 초래한 청사진에 위험스럽게 독단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강력한 이해관계가 실험의 성공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은 실험의 합리성 또는 과학적 가치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점진적인 방법은 반복된 실험과 지속적인 재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사실상, 점진적인 방법은, 정치가들이 그들의 잘못을 둘러대고 그리고 그들이 항상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실수가 무엇이었는가를 찾기 시작하는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가게 한다. 점진적인 방법은 유토피아적인 계획 또는 역사적 예언이 아니라, 정치에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의 비밀은 잘못으로부터 기꺼이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다.”¹³⁾

점진적 사회공학의 명법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없애려고 노력하라.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복을 이룩하려고 하지 말라. 구체적인 비참함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가난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가난을 없애려고 노력하라. 병원이나 의과 대학을 건립하여 전염병이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라.

11) Karl Popper, 앞의 책(1978), p.360.

12) Karl Popper, 앞의 책(1976), p.66.

13) Karl Popper, 앞의 책(2013), pp.152 ~ 153.

범죄와 싸우듯이 문맹과 싸우라.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행하라. 네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긴급한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인내력을 가지고 설득하라.”¹⁴⁾

“이상적인 선의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시인이나 예언자의 꿈을 통해서 이상적인 선을 알 수 있다. 이상적인 선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높은 곳에서 선언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공정한 판단과 같은 합리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열적인 설교자의 감정적 태도를 요구한다.”¹⁵⁾

포퍼는 자유주의자인가

“나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며,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강제와 정부 관리의 오만을 증오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가는 필요악이다. 국가가 없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슬픈 일이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도 많아진다는 주장은 진실이다.”¹⁶⁾

“나는 항상 ‘자유주의자(liberal)’, ‘자유주의(liberalism)’라는 말을 (미국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전히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나는 자유주의자를 어떤 정당에 동조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를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권력과 권위가 안고 있는 위험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¹⁷⁾

마지막 인터뷰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완전고용의 문제를 숙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1965년 이후 경제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고용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아닙니다.”¹⁸⁾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무도 기아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완전고용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네 번째는 교육

14) Karl Popper, 앞의 책(1978), p.361.

15) 같은 책, 같은 곳.

16) Herbert Marcuse and Karl Popper, 앞의 책(1976), p.87.

17) Karl Popper, 앞의 책(1978), p.viii. K.R. Popper, *In Search of A Better World : Lectures and Essays from Thirty Years*, (London: Routledge, 1992), p.160 note.

18) I. Jarvie and S. Pralong (eds), *Popper's Open Society After 50 Years*, Routledge, 1999, p.36. 사망 6주 전(1994년 7월 29일) 마지막 인터뷰다.

입니다.”¹⁹⁾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계에 대한 낙관주의자입니다.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로지 낙관적인 입장에서만 우리는 적극적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관주의자가 된다면, 당신은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낙관주의자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대단히 아름답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²⁰⁾

19) I. Jarvie and S. Pralong (eds), *Popper's Open Society After 50 Years*, Routledge, 1999, p.36.

20) I. Jarvie and S. Pralong (eds), *Popper's Open Society After 50 Years*, Routledge, 1999, p.38.

A Note on James M. Buchanan and Public Choice

James M. Buchanan, Public Choice, Political Failure, Public Finance, Fiscal System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I. Overview of Life: James M. Buchanan

A. James M. Buchanan is largely known as the pioneer (along with Gordon Tullock) of the field known as Public Choice.

i. Buchanan won the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in 1986 for his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public economics.

ii. Nobel Foundation (1986) notes “his development of the contractual and constitutional bases for the theory of economic and political decision-making” as the prize motivation.

B. Buchanan (1992), however, asserted that he “had never entertained a prospect of Nobel Prize status” and regarded himself as one of the non-elite who is too far outside the mainstream.

i. Buchanan, for example, believed that he would “have never been selected for such an award had the selection committee been drawn from senior American economists.”

ii. He also self-described as “the only Nobel prize representative of the great unwashed in American academia. . . without the prestige value of intellectual-scientific and social ranking.”

iii. Buchanan certainly thought himself as an outsider with the moral responsibility of being a representative of those with the social distance from the central thrusts in various aspects.

iv. His assertion that “if Jim Buchanan can be selected for a Nobel Prize, anyone can” highlights the intellectual tension against the established academia (above the Mason-Dixon line).

C. The root of such self-assessments can be even traced back to his days as a youth in Tennessee where he lived until the military service during

the World War II.

- i. Born in 1919, Buchanan attended a local public secondary school and a small state-financed teachers college, which is a rare educational background you will find in any Nobel laureate.
- ii. Much of his personal history (or at least his own assessment of it) can be revealed through his retrospective query on the prospect of winning the Nobel prize.

For how many farm boys from Middle Tennessee, educated in tiny, poor, and rural public schools, and at a struggling state-financed teachers college, have received Nobel prizes? How many scholars who have worked almost exclusively at southern universities have done so, in any scientific discipline? How many of my economist peers who are laureates have eschewed the use of both formal mathematical techniques and the the extended resort of empirical testing? (Buchanan, 1992)

- iii. One can easily see that Buchanan takes the pride of being a true American story who has arisen from or beaten the odd against such a social acclaim.

D. In this talk, I will try to provide a brief intellectual history of James M. Buchanan and to shed some lights on several key concepts that underlie the logic of the Public Choice.

- i. I have deliberately chosen not to discuss Buchanan's most famous (and perhaps the most influential) contribution, The Calculus of Consent, coauthored with Gordon Tullock.
 - a. Though Buchanan and Tullock (1962)'s co-work is, without doubt, the key in understanding the modern development of the Public Choice, its reviews are widely available.
 - b.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 refer to Guttman (1998); Mueller (1976, 1993); Wagner (1988) who discuss its various aspects.
- ii. I will rather review two papers that, I believe, let us see through the stages of development in Buchanan (1949, 1964)'s intellectual legacy.
 - a. Two papers will be somewhat discussed intertwiningly as the subjects under each paper's inquiry are closely related.
- iii. This lecture, hopefully, will reveal what makes Buchanan unique as an economist as well as the reasons behind Buchanan's tension against

the established academia.

II. Buchanan as a Critic of Public Finance

A. Buchanan (1949)'s criticism on the usual approach found in Public Finance is a good example that alludes the development of ideas behind Public Choice.

i. It is surprising that, despite written at the midpoint of the 20th century, how relevant his criticism is to today's debates over the tax system in Korea.

a. Its relevance, along with other works', to today's world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s the main arguments of Buchanan's works are unveiled.

ii. The purpose of Buchanan (1949), in short, can be summarized as the exposition of the shortcomings in the approaches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government finance.

iii. Along with the constructive criticism of the modern development in Public Finance, Buchanan (1949) also suggests a more suitable approach of examining the fiscal system.

B. Buchanan (1949)'s main criticism on the methodology used in Public Finance is the separate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public expenditures and the distribution of tax loads.

i. To do so, Buchanan (1949) distinguishes the methodological construction in Public Finance as either organismic or individualistic theory.

ii. Organismic theory refers to the construction of state as a single decision-making entity acting for society as a whole.

a. The construction of the maximization problem using a single social welfare function is an illustrative example that belongs to the organismic theory.

b. Often regarded as the theory of budgeting, its main application has been on defining the optimum allocation of public expenditures among alternative uses.

iii. Individualistic theory refers to the construction of state as the sum of individual members acting in a collective capacity.

a. The individual replaces the state as the basic structural unit,

and state decisions become the desires of individuals to fulfil a certain portion of individuals' wants collectively.

- b. Primary attention is given to the allocation of tax loads where the relative tax pressures imposed upon individuals are mainly analyzed.
- iv. Both theories, however, tend to only show one facet (either budgeting or taxation) of fiscal system that actually consists of both, budgeting or taxation, sides.

C. The reason why any analysis on fiscal system should not capture its particular facet can be easily revealed as one examines the usual result that either theory leads to.

- i. Organismic theory, for example, leads to the result that suggests the welfare maximizing allocation of public expenditures among the alternative uses.
- ii. Such a result rests on the principle of equimarginal addition or the condition under which a dollar of expenditure yields the same return, in addition to social welfare, in each budget item.
- iii. The optimum allocation of public expenditures, however, is independently determinate only for a given apportionment of the tax load.
 - a. It is evident that the necessary condition that meets the principle of equimarginal addition is altered as there is a change in the apportionment of the tax load.
 - b. In other words, for each change in the apportionment of the tax load, a new optimum allocation of public expenditures must be found.
- iv. The functional interdependence of the whole fiscal system (i.e., expenditure and tax), therefore, should not be overlooked in any analysis that utilizes the organismic theory.
 - a. Note also that the organismic theory can be used to find the optimum apportionment of tax loads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marginal sacrifice or the least-aggregate-sacrifice.
 - b. In other words, it leads to an apportionment of tax loads that minimizes the subtraction from social welfare for a given allocation of public expenditure.

- c. Such an application of the organismic theory or subtraction can be used only with reference to a social, not an individual, concept of utility.

D. The problem from failing to capture the complete picture of fiscal system becomes clear when the analysis on the relative tax pressures without the discussion on the benefit is considered.

i. The analysis based on tax-burden alone, for example, has led to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of tax system as regressive, proportional, and progressive.

- a. The convenience of such a classification is on the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ax system based upon the ratio of tax burden to income at different income levels.
- b. Regressive, proportional, and progressive taxation is used to depict the distributive effect of taxation on real income among individuals.

ii. The problem of such a classification is on its failure to explain the nature of fiscal system, that is, its true distributive effect on real income among individuals.

- a.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the benefit (i.e., expenditure) side of fiscal system, such a classification would fail to characterize the nature of fiscal system.
- b. What it can tell us is that categorically progressive taxation will produce a more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than would proportional or regressive taxation.

iii. If a major share of expenditures were allocated to the provision of the benefit for the wealthy, for example, even a progressive taxation may not prevent the increase in real income inequality.

- a. If individual shares in the common benefit from public expenditures are all equal, proportional taxation will also lead to a more equal distribution.
- b. Furthermore, if benefits were wholly in the nature of social services, even a regressive taxation may well be a part of a redistributive fiscal system.

iv. The classification based only on taxation, with the omission of expenditure side, would fail to provide the complete picture on its true redistributive effect.

E. Buchanan (1949), thus, argues that the interdependence of two sides (i.e., public expenditure and taxation) of the fiscal process needs to be clearly recognized.

- i. The omission of either facet in fiscal system or any analysis in isolation leads to more problems than it otherwise would have.
- ii. To overcome such problems, Buchanan (1949), for example, suggests the adoption of a new classification of fiscal system that considers public expenditure and taxation simultaneously.
 - a. The true distributive effect on real income among individuals may be described by the adoption of aggravative, status quo, and equalitarian based on the residuum.
 - b. Aggravative fiscal system would imply low-income individuals are with positive residuums, i.e., taxes in excess of benefits.
 - c. Status quo fiscal system would imply low-income individuals are with zero residuums, i.e., taxes and benefits are equal.
 - d. Equalitarian fiscal system would imply low-income individuals are with negative residuums, benefits in excess of taxes.

III. Buchanan as a Philosopher of (Economic) Science

A. Buchanan (1964)'s idea on what economists should do is also an example that shows why he may qualify as an outsider of mainstream economics.

- i. The distance from the mainstream economics also reveals the quality of Buchanan (1964) as a philosopher economic science.
- ii. It is also evident that his methodological approach has a better fit with what was suggested during the Scottish Enlightenment (such as by 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B. The core argument in Buchanan (1964) is that economists should get back to where they belong by departing from a so-called maxU approach.

- i. He worries that the portrait of core economic problem as resource allocation has led economists to desert the theory of market.
- ii. For example, consider the content of a typical introductory economics course and how it is taught to the undergraduate students.
- iii. A typical undergraduate in a principle course will consider a consumer's problem of choosing among various competing products

with a given budget as a typical economic problem.

- iv. Such a problem, however, is a technological problem that is same as a construction engineer's problem of allocating a budget to build a dam where only a single best solution exists.

C. According to Buchanan (1964), the focus should be put on the problems of individuals that involve barter, trade, bargain, and exchange in a market-setting.

- i. The problem that Robinson Crusoe faces alone in an island is different from the problem that he faces as another person, Friday, arrives.
- ii. The former is the problem of resource allocation, while the latter is the problem of exchange, trade, or agreement, that of finding the opportunity for mutual gains through cooperative endeavor.
- iii. If the economic problem is viewed as the general means-ends problem of resource allocation, the social engineer is a working economist in the full sense of the term.
- iv. The proper role of the economist is not providing the means of making better choices, but studying the whole system of exchange relationships where mutual gains are realized voluntarily.

D. The theory of market places the exchange behavior through the association of individuals at the centre stage rather than the choice.

- i. A market is not competitive by assumption or by construction, but it becomes competitive as competitive rules or institutions emerge to place limits on individual behavior patterns.
- ii. It is this becoming process, brought about by the continuous pressure of human behaviour in exchange, that is the central part of economics.

IV. Further Readings

A.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idea behind Public Choice, there are several works of Buchanan that deserve the attention.

- i. Buchanan (1959, 1987, 1988) for instance, is a good starting point that can reveal Buchana as an originator of Public Choice.
- ii. His collaborations with Tullock, Brennan, and Wagner should not be

overlooked in understanding the core arguments of Public Choice (Brennan and Buchanan, 2008; Buchanan and Tullock, 1962; Wagner and Buchanan, 1977).

iii. Buchanan (1975) along with Buchanan and Musgrave (2000), however, remain as my personal favorites.

References

- Brennan, Geoffrey and James M Buchanan. 2008. The reason of ru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chanan, James M. 1949. "The Pure Theory of Government Finance: A Suggested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7 (10):496-505.
- . 1959. "Positive Economics, Welfare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24-138.
- . 1964. "What Should Economists Do?" *Southern Economic Journal* :213-222.
- . 1975. *The limits of liberty: Between anarchy and Leviathan*, vol. 71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 1987. "The Constitution of Economic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243-250.
- . 1988. "Market Failure and Political Failure." *Cato Journal* 8:1.
- . 1992. "Notes on Nobility." In *Better Than Plowing, and Other Personal Essay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Buchanan, James M and Richard Abel Musgrave. 2000. *Public Finance and Public Choice [Two Contrasting Visions of the State]*. MIT Press.
- Buchanan, James M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uttman, Joel M. 1998. "Unanimity and Majority Rule: the Calculus of Consent Reconsidere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4 (2):189-207.
- Mueller, Dennis C. 1976. "Public choice: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5-433.
- . 1993. "The "Virginia School" and Public Choice." In *The Public Choice Approach to Politics*. Edward Elgar Publishing, 431-444.
- Nobel Foundation. 1986. "The Prize in Economics 1986 - Press Release." http://www.nobelprize.org/nobel_prizes/economic-sciences/laureates/1986/press.html.
- Wagner, Richard E. 1988. "The Calculus of Consent: a Wicksellian Retrospective." *Public Choice* 56 (2):153-166.
- Wagner, Richard E and James M Buchanan. 1977.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